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2 (2019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3.2.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유 한 별** 나 태 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발생여부나 신문기사 수를 통해 나타난 갈등의 심각성은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갈등 체감도와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갈등, 조례, 신제도주의, 동형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NGO

Ⅰ. 서론

한국 사회의 갈등 체감도는 매우 높다.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약 800 만개의 뉴스기사와 함께 2, 800만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사회적 구조나 이슈 등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 뿐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의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등이 세대, 성별 등을 넘어 이웃, 가족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가히 '갈등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도 57.5%의 응답자가 우리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636).

^{**} 제 1저자

^{***} 교신저자

나라의 갈등정도가 더 심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심하지않다고 답변한 사람은 단 6.5%에 불과했 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실제로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등에서 모두 저조하여,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최하위인 29위 를 기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러한 국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이 높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갈등으로 불거졌던 입지 갈등 사례인 밀양 송전선로 건 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의 사례와 환경 분 야에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갈등의 이해당사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인수, 2017; 김재광, 2019; 이승모, 2018; 이용훈, 2013).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대통 합종합계획(2014)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34개를 선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협력, 세종시 법인택시 노사화합 체육대회, 경남 버스 승 하차 도우미 배치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제도적 틀을 바꾸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제 도적 틀을 바꾸는 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보다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틀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제도 구성 노력으로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가 속속 제정되었다. 하지만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일부 특정한 영향 요인이 조례 제정을 모두 이끌어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 형성에 있어 제도주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특정 요인이 갈등 관련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필 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동학을 보다 거시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과 경제적 요인(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의 특수성을 영향 요인 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제도주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조례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관 점에 주목하여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의 동형적 변화 가능성을 살 펴보고, 동형적 변화가 관찰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해당 갈등 관련 조례들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군집화, 동형화(Isomorphism)의 모습 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갈등과 관련 선행연구, 갈등 관련 조례

공공갈등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과 관계된 개인, 집단 간 목표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공공갈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시민에 삶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집단 간 목표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서 술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사례 는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연구는 강문희(2011), 권영규 (2006), 이주현 외(2010)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건설, 청계천 건 설 갈등, 화력발전소 건설, 장사시설 건설 갈등 등을 다루었다. 특히 강문희(2011)의 연구는 장기 간 대립적 상황이 고수된 남양주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건설 사례를 다툼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부재, 이해당사자의 협력의 부재 등을 갈등의 지속 원인으로 보았다.

둘째로, 강원도, 충청남·북도 사례를 연구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규 외(2013), 오성호 외(2006), 이영동 외(2007), 임정빈(2007), 최병학(2014)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 트호 유류 오염사고 갈등 사례, 충북 진천군 축산 민원 갈등 사례, 당진항 갈등 사례, 쓰레기 소각 장 갈등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 다룬 강원, 충청남·북도의 갈등 사례는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모습 도 관찰 되었으며, 환경과 관련한 님비현상, 핌피현상으로 인한 갈등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전라남·북도의 갈등 사례를 다룬 논문은 강인호 외(2005), 송재복 외(2013), 이민창 외 (2005). 조승현 외(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주로 광주-전남지역의 갈등양상을 분석하여 선호시 설 유치(정부기관 합동청사, 경륜장, 세계박람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 갈등 사례를 다루었 다. 또한 전남 영광과 고창의 폐기물 처리시설 선설에 대한 갈등, 새만금 관련 갈등, 군부대(35사 단) 이전 갈등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북도의 사례를 다룬 논문은 김태운(2014), 이영동 외(2007), 이주현 외 (2010), 장현주(2018), 허철행 외(2012) 등의 연구가 있다. 해당 논문들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반구대 암각화, 송전선로, 신공항 건설 등 특정 사례와 관련한 갈등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지방 자치단체 내 공공갈등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갈등사례에 대한 탐구와 함께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갈등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는 중앙정부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02년 대 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2006년에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량 및 이행

계획('01~'10)의 수립, 2011년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11~'15), 2016년 제 3차 지속가 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며 사회 통합적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갈등 관리 기본법』의 입법이 추진하였으나,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2007년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 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북도가 2007년 11월 23일 첫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201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1곳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74곳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리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어 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어떠한 양상으로 갈등 관련 조례가 확산·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갈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갈등 관련 조례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양상을 살피고, 향후 연구 설계 및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 및 갈등 조례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갈등 관련 조례는 기본적으로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갈등 관련 조례를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도입, 제정하였는지, 어 떠한 확산 과정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다룬 논문은 몇몇 저자들에 한정해서 진행되고 있으 며, 아직 그 성과가 미비해 보인다. 갈등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관 련 갈등 연구들은 사례연구로 진행 되었으며, 문헌분석과 일부 양적방법을 통한 연구가 대종을 이 룬다. 해외연구는 학교 구역과 관련되거나, 규제, 재난 등과 관련된 특수한 갈등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연구들은 주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변성수 (2010), 하혜영(2018)은 행정학 분야의 갈등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 연 구가 80% 이상이 사례연구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류도암 외(2016), 윤태웅(2012), 하혜영(2007) 등의 연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ANOVA 분석, 순위로짓모형, 회귀분석 등을 사용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지방 정부 간 갈등 발생 시 토론과 협상에 관한 제도 정착화, 주민참여제도의 시행, 지방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전문성 향상,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적 의사 교환(일방적 의사결정에서 쌍방적 의사결정으로의 전 환), 경제적 유인책 제공, 주민참여 수준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로서 우 선, 문승민 외(2017)의 연구는 정책 혁신·확산에 관한 통합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은 단체장 득표율이 조례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공갈등의 발생, 수직·수평적 확산은 갈등 관련 조례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동기 외(2013)의 연구에서는 광주, 대전, 인천, 부산,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지방자

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여 조례의 명칭, 목적, 용어, 갈등 관리 조직 등 다양한 분석 항목을 설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 구는 갈등관리 기구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한 지적과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중심의 갈 등 관리 위원, 갈등 관리 구성, 운영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석준 외(2016)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 확산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갈등 예방 조례가 자율적 조례 채택 과 정을 혁신 정책의 확산으로 보고 확산 추동 요인을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적 효과, 수직적 확산 메커니즘과 같은 외부적 요인, 공공분쟁 발생 변수 등이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관련 조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건사 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사용하였고, 이론적으로 정책 확산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더 하여 일부 연구에서 갈등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온 바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열거한 갈등 관련 조례의 연구에서 확인하지 않은 갈등 관련 조례의 지리적 군집화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갈등 관련 조례가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GIS 통계 적 검정을 먼저 진행한다. 군집화와 확산에 대한 지리적 연계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후 신제도주 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접근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추가 적인 통계적 검정을 하고자 한다.

3.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2007년에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갈등 관련 조례들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갈 등 관리 방법이 조례의 형태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을 접목하 여 설명할 수 있다. 조직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해당 조직과 비슷한 조 직을 관찰하거나 조직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살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 본 연 구의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이용한 갈등 관리 방식과 같이 그 조례에 대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환경을 고려한다.

제도적 환경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원자화된 조직체로 이해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정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자이고 결국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Meyer&Scott, 1983; Powell, 1991). 다양한 주체들 이 존재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정당성(legitimacy) 및 적절성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볼 수 있다(March&Olsen, 1984; Thornton & Ocasio, 2008). 이러한 상 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도입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직장(organization field)1)에 있다

¹⁾ 조직장은 공유되는 규칙, 규범 등의 체계 내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직들이 존재하는 장 또는

고 볼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문화적인 기대에 부합하려는 경향을 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갈등 관련 조례의 경우 2007년 이전에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도입하고 있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첫 도입 주자의 성공을 목격하고, 해당 조례의 제정이 갈등 관리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에 대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때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도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도입 과정의 맥락을 고려하여 갈등 관련 조례의 성공을 확인함 및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은 지리적 인접 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목격의 가능성이 높고, 그 정당성 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일어 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조례 도입의 과정을 지리적 상관성을 이용 한 통계적 검정 및 확산 과정의 시각화를 통해 지역적 군집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 지리적 군집성이 나타난다.

가설 1-1.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 지리적 군집성이 나타난다.

가설 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 지리적 군집성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설 1에서 지리적 군집성을 확인하여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지리적 인접성이 높을 수록 조례의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동형적 변화를 관측하였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조 례 도입의 군집성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이 필요하다. 이를 검정 하기 위해서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원자화된 사조직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 주 체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imaggio&Powell(1983)의 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동형화의 영향, 조직장의 영향을 받는 조직으로서,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모방 의 과정(mimetic proceses), 규범적 압력(normarive pressures)2) 등의 과정을 거쳐 동형적 형태가 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도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형화의 논리에 따라 그 확산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검정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적 동형화의 압력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타 조직, 상위조직으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이 있는 상태 혹은 해당 조직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기 대 및 압력 등에 의해 조직이 변화를 통해 동형적으로 수렴해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들에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압력에 따른 변화를 정책 확산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수직적 확산을 고 려하여 상위 정부의 조례 제정과 미제정 여부를 통해 강제적 제도의 확산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강제적 동형화가 사회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제도 형성에 대한 요구(압 력)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사건의 발생과 갈등을 다룬 지방신

집합으로 볼 수 있다(Scott, 2003; 정명은 외, 2009; 정명은·안민우, 2016; 조희진 외, 2018. 재인용)

²⁾ 모방의 과정은 모방적 동형화로, 규범적 압력은 규범적 동형화로도 서술될 수 있다. 동형화 관련 용어는 하연섭(2003)의 저서를 따른다.

문기사 수를 통해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 강제적 동형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 2는 다음 과 같다.

가설 2.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강압적 압력은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지역 내 갈등 사례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지역 내 갈등과 관련한 신문기사 수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은 같은 조직장 내 정책 및 제도를 앞서 받아들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여 비슷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장 내 선도 조직(Leading Organization)으로 여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형태의 정책, 법, 제 도 등을 모방하고, 동조함으로써 조직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외부적 정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 는 방식으로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에 반응한다. 이를 본 연구 주제에 따라 해석하면, 선도 조직으 로 여겨지는 지방자치단체는 갈등 관련 조례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위(광역, 기초 등)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인 인접성과 관련한 모방적 동형화는 가설 1 에서 지리적 연관성에 근거한 공간 분석과 함께 시각적으로 살필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서 는 기능적으로 등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누적 비율이 오르면 그 영향을 받아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적 등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누적 비율 변화 에 따른 조례 제정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가설 3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기능적으로 등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 압력은 전문가, 공인 교육기관 등 다양한 전문화된 개인, 집단 등에 의해 조직이 규범적 압력을 받아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을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 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그 의견에 순응하여 제도, 정책 등을 받아들이게 되고, 조직이 동 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갈등 관련 전문가, 위원회 등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개 체들에 의해 조직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관리 전문가, 갈등 관련 위 원회 등은 그 인력풀(Pool)이 넓지 않으며,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적 규범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김미나, 2007).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갈등 관리에 대한 규범적 동형적 변화는 갈등 관리에 관심이 있 는 민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해줄 수 있는 해당 지역 내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들이 최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형태로 적극적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갈등, 환경,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개입이 진행되었고, 이는 지방의 고질적 전문가 부족3)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일종의 전문가의 역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란희 외, 2017). 따라서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 4. 지역 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수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설계

1. 자료 수집과 변수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동형적 변화를 살피고, 제도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갈등 관련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개 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자료의 수집은 먼저 가설 1의 검정을 위해 공간적 통계 분석을 선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 도구에서 필요로 하는 .shp 형태의 데이터와 함께 각 분석을 위한 속성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X, Y 좌표, 시군구 코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등을 포함한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공간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shp 형태의 데이터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 kostat.go.kr)에서 데이터를확인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시군구 코드 및 좌표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및 시도청을 중심 좌표로 구성하였으며, 시군구 코드는 통계청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코드에 따랐다.

다음으로 가설 2~4의 검정을 위해 사건사 분석에 필요한 패널 자료의 구축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여부(0, 1)이며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갈등 관리', '갈등 예방', '갈등 해결', '갈등 민원', '공공 갈등', '갈등 조정' 등 갈등과 관련한 단어를 포함한 조례명을 가진 조례를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압적 동형화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있어 지역 내 갈등 사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 DB를 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지방신문기사의 '갈등' 관련 기

³⁾ 매일경제, "전문인력 어디 없나요…" 난제 부닥친 도시재생 뉴딜(2017.07.21.) 기사 등 최근 지방 전문인 력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이 적다는 언론 보도 및 보고서는 다량이다.

사 수는 '갈등'을 키워드로 하여 한국언론재단의 언론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을 이용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 신문사 선정 후 참고 및 확인하였다. 4) 다음으로 가설 3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례제정비율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례제정을 확인하였으며, 2007~2017년의 각각 연도에 따라 비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분류하여 각각 전체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수(광역 전체, 기초 전체) 대비 해당년도에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련조례 누적 제정 비율(%) = (해당 년도까지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누적 수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 * 100

지방자치단체의 수(광역, 기초)를 측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수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을 기반으로 하 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수를 측정하였다. 더하여 조례의 정책 확산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라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내 인구 수, 재정 자주도와 자립 도, 정부 형태(부점, 단점 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장 경험,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에서의 득 표윸 등을 선정하였다(무승민 외, 2017; 유란희, 2017; 장석준, 2016). 측정방법과 출처는 〈표 1〉과 같다.

⁴⁾ 광역지방자치단체 신문사는 서울은 서울신문, 부산은 부산일보, 대구는 대구신문, 대구일보, 인천은 경인 일보, 인천일보, 광주는 광남일보, 광주드림, 광주매일시문, 광주일보, 대전은 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대 전투데이, 울산은 울산매일신문, 울산저널, 울산제일일보, 울산종합일보, 경기는 경기신문, 경기일보, 고 양신문, 군포시민신문, 기호일보, 수원일보, 강원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은 충북인뉴스, 충북일 보, 충남은 충남일보, 전북은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 전남은 남도일보, 전남일보, 경북은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남은 경남도민신문, 경 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로 선정하였다.

〈丑	1>	변수	측정	밓	자료

분석방법	구분	변수		측정	자료
공간 분석	.Shp		벡터	폴리곤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좌표	X,	Y 좌표	EPSG:5174 -Korean 1985	국가공간정보포털
	조례제정여부	제	관련 조례 정 여부 역, 지방)	제정=1 미제정=0	국가법령정보센터
	종속변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제정=1 미제정=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변수	강제적 동형화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사건의 발생여부	발생=1 미발생=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적 기대 요인)	신문기사 수	건	한국언론재단 DB, NAVER 포털사이트 검색
		모방적 동형화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련 조례제정누적 비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규범적 동형화	비영리단체 수	개	행정안전부
사건사 분석	통제변수	인구	구수(로그)	명	내고장알리미
		재	정자립도	%	내고장알리미, 재정고
		재	정자주도	%	내고장알리미, 재정고
		 전	 부형태	단점정부 = 1 분점정부 = 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단체	헤장 경험	단체장 경험 있음 = 1 없음 = 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단체	장 득표율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간 분석(Spatial analysis)과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공간 분석은 기존 회귀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공 간적 의존성, 이질성을 밝히는데 유용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공간 분석은 공간상의 특정한 위치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과 그 주변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행정구역으 로 집계되어 수집된 데이터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희연, 2012). 본 연구에서는 조례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리적인 의존성을 확인해봄으로써 제도의 동형적 변화를 시각적 통 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제도의 동형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간 분석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뉨을 염두 해두어야 하는데 공간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적 이질성 (Spatial heterogeneity)이 있다. 동형적 변화는 지리학 제1법칙인 '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

과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 보다는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 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이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하는 본 연구의 논의에 따라 공간 상관성(의존성)을 검정할 수 있는 Moran' I, LISA 분 석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활용하기 위하여 GIS 분석 도구 중 하나인 GeoDa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도입에 있어서 공간적 군집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위하여, 공간가중행 렬(Spatial weight matrix)을 구축한 후 Univariate Moran'I 분석과 LISA 분석을 함께 하기로 한다. 공간가중행렬은 Queen 방식으로 구축하였으며, 갈등 관련 조례의 공간적 변화는 1년 단위로 보는 것은 그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3년~4년 단위로 공간 군집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Queen 방식은 기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기준 지역과 경계를 맞 닿아있는 모든 지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연관성을 Connectivity map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방식의 공간 가중 행렬을 이용하고,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4개 년도를 대상으로 공간 분석을 실시하 기로 하며,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를 별개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 상관성이 높게 측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받아서 동형적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을 통해 그 영향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사건사 분석은 패널자료(시계열-횡단면 통합 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특정 분석 대상이 연구가 진행되는 특정 기간 동안 사건 (Event)을 경험한 확률과 공변량, 변수의 영향력 등을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이재열 외, 2005; 석호원, 2010). 일반적으로 사건사 분석의 모형 형태는 다음과 같다.

$$h_{i}(t) = g(h_{0}(t), \beta_{0} + x_{1}\beta_{1} + \cdots + x_{n}\beta_{n})$$

이 함수 모델에서 위험률 함수에 대한 해석은 모든 개체의 동일한 재해율 ho(t)을 가정하고 있는 동시에 차이는 eta_0 + \mathbf{x}_1eta_1 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 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사건사 분석에서 베이스라인 위험률 이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Exponential 분포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Box-Steffensmeier et al, 2006). 또한 기준년도 2007년부터 2017년까지를 (t₁)으로 설정하고 이 t₁에서 1년씩을 차감하 여 Lagged 변수(t₁-1)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t₀로 설정하여 사건사 분석의 설정(setting)에 반영하였 다. 이러한 사건사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갈등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STATA 14버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Ⅳ. 분석결과

1. 갈등 관련 조례 현황 및 공간 분석을 이용한 동형적 군집 파악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충북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5개, 2013년에 9개, 2017년에 1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5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지방자치단체 229개에서 경기도 시흥이 2008년도를 시작으로 2013년에 38개, 2017년에 7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관련 조례를 제정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 1〉6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갈등관리조례 제정 현황 80 70 60 50 40 30 20 1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기초제정 ••••• 기초누적제정 광역자치단체 갈등관리조례 제정 현황 12 10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제정 •••• 광역누적제정

〈그림 1〉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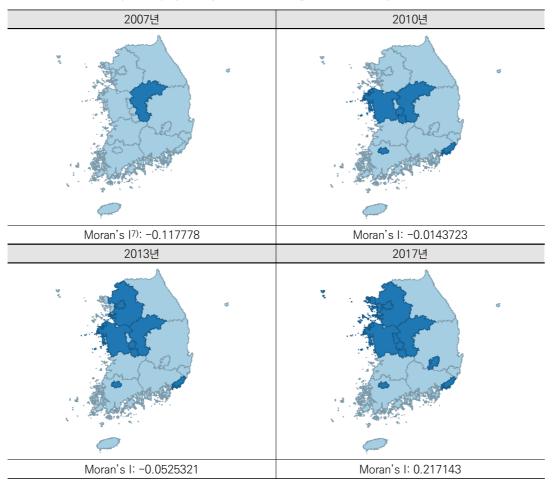
⁵⁾ 충북, 광주, 대전, 부산, 충남, 서울, 전북, 경기, 대구, 인천 순으로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⁶⁾ 점선은 갈등 관련 조례의 연도별 누적 제정 현황이며, 실선은 해당 연도에 제정된 조례의 수이다.

이처럼 갈등 관련 조례는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례는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신뢰 형성,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관련 조례가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동형적 변화를 가지고 제정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공간 분석하여 〈가설 1〉을 검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시기적으 로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3~4년 단위로 LISA 분석을 통해 공간 군집성을 확인한다.

시기적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3~4년 단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군집성 검정을 진행하는 이유 는 조례 제정의 경우 1년 단위로 분석을 할 경우 그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 관련 조례의 변화 양상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3~4년 단위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더하여 이러한 공간적 군집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Moran's I로 공간 군집성을 통계적으로 검 정하기로 한다. 아래 〈그림 2〉는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에 대한 군집성을 확인한 결과이 며, 진하게 칠해진 지역이 갈등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림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변화



⁷⁾ Moran's I 값은 -1⟨P⟨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자기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그래프

상기한 바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광 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의 지리적 확산에 대해 관찰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적 동등성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광역시 간 확산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 동등성에 따른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확산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하며, Moran'I 값에서도 2017년에 0.217143(20%) 의 군집성을 보이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조례 제정에 대한 군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3〉은 기초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에 대한 군집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진하게 칠해진 지역이 갈등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이다.

〈그림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변화

2007년	2010년		
Moran's I: 0	Moran's I: -0.0115677		
2013년	2017년		
Moran's I: 0.300879	Moran's I: 0.182671		

의 기울기가 (-)값을 갖고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또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 상관관계가 있 음을 나타내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값을 가져 우상향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Moran's I 값 은 0.3 이상이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2 이상은 군집화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7~2017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경기 도 시흥시를 시작으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의 지리적 확 산에 대해 관찰하여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확산을 시각적으로 검정할 수 있 다. 또한 Moran'I 값에서도 2017년에 0.182671(18%)의 군집성을 보이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조 례 제정에 대한 군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화 경향을 통해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적 동등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을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서 서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1〉의 〈가설 1-1〉, 〈가설 1-2〉는 모두 Moran's I 값으로 군 집성과 관련하여 그 유의미함을 판단 할 수 있었다.

2. 사건사 분석을 이용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

〈가설 1〉에 따라 갈등 관련 조례들은 뚜렷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정하였으 나, 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군집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그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동형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기초지방자 지단체 대비8)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동형적 변화가 2007년과 2017년 기준으로 Moran'I 값 20% 이상의 변화를 보이며 뚜렷하게 관찰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9에 대하여 〈가설 2〉~〈가설 4〉를 검정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변수명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자치단체	165	8	4.333646	1	15
연도	165	6	3.171904	1	11
조례제정유무	165	0.4181818	0.4947619	0	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사건의 발생여부	165	0.7393939	0.4403016	0	1
신문기사 수	165	2029.552	4906.304	0	30902
광역지방자치단체갈등관련조례제정누적비율	165	44.84848	23.35497	6.666667	73.33333
시민단체 수	165	614.4182	430.6425	217	2215
인구수(로그)	165	4.12699	0.9481881	0	5.105946
재정자립도	165	43.28624	20.4193	10.43	90.44
재정자주도	165	56.75758	16.28125	30.21	93.15
정부형태	165	0.830303	0.376509	0	1
단체장경험	165	0.569697	0.4966257	0	1
단체장득표율	165	58.98255	9.826775	42.25	77.98

〈표 2〉 기술 통계표

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 → 2017년의 변화 과정에서 Moran's I 값이 줄어들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Moran's I 값이 증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사건사 분석을 진행할 경우,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와 신문기사, 갈등 사건 발생 여부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만 변수 측정 가능하다 는 점, 사건사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기에 변수의 변화 미미, 변수 분포 측정 불가 등의 문제로 광역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⁹⁾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신생 특별자치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특별자치도 이므로 그 특수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한다.

해당 변수들을 이용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丑	3>	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Haz. Ratio	Std. Err.	Z	P⟩ z	
독립 변수	강제적 동형화 (사회적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사건의 발생여부	2.598931	3.128477	0.79	0.428	
	기대 요인)	신문기사 수	.9998456	.0001195	-1.29	0.196	
	광역 모방적 지방자치단체 동형화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비율		1.058403**	.0257588	2.33	0.020	
	규범적 동형화	비영리단체 수	1.003024*	.0015851	1.91	0.056	
	인구수(로그)		1.109831	.6013019	0.19	0.847	
	재정자립도		.8248668**	.070306	-2.26	0.024	
= +11	재정자주도		1.306463**	.1505347	2.32	0.020	
통제 변수	정부형태		8.308743	11.74461	1.50	0.134	
	단체장 경험		.8176817	.6853539	-0.24	0.810	
ĺ	단체장 득표율		.8756796***	.0362028	-3.21	0.001	
	상수		.0002267	.001271	-1.50	0.134	
Log likelihood = −9.8018181							
LR chi2(10) = 18.90, Prob> chi2 = 0.0415							
No. of subjects = 15, Number of obs = 106							
No. of failures = 10, Time at risk = 106							
logand: * n/ 1: ** n/ 05: *** n/ 01							

legend: * p\langle.1; ** p\langle.05; *** p\langle.01

상기한 결과를 해석10)하면,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강압적 압력(강제적 동형화)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갈등 사례와 지방 신문기사수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나 가설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가설 2〉는 전체 를 기각하였다.

다음으로 모방적 동형화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제 정 누적 비율은 〈가설 3〉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4〉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로 측정한 지역 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수는 〈가설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¹⁰⁾ 사건사 분석 결과에서 회귀 계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귀 계수-1)의 부호가 (+) 라면 조례 채택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귀 계수의 부호가 (-)라면 조례 채택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장석준, 2014; 장석준, 김두래, 2014).

^{11) 〈}가설 3〉 1.058403(광역지방자치단체갈등관련조례제정누적비율)-1=0.058403(정적 유의미성), 〈가설 4〉 1.003024(비영리단체수)-1=0.003024(정적 유의미성)

본 연구에서 〈가설 2〉는 강제적 동형화의 압력 중 사회, 문화적 압력이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강압적 압력에 대한 측정 주요 변수인 상위 정부의 압력을 제외하고, 비공식적 사회적, 문화적 기대 및 압력을 측정하 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발생 건수와 신문기사 수를 측정하여 갈등 조례 제정을 할 수 밖 에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갈등 관련 조례에 사회적인 강제적 압력을 가하는지에 대 한 측정을 하였다. 하지만 해당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결과가 도출됨에 따 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강제적 동형화 압력은 중앙정부에 재정적,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치 단체의 경우에 수직적인 확산(Vertical Diffusion)의 메커니즘¹²⁾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적 영향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가설 3〉에서 모방적 동형화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제 정 누적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영향을 측정하였는데, 〈가설 3〉이 통계적 유의미성에 따라 채 택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모방적 압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조례 제 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도적 확산이 일어나는 변수를 설정하여 수평적 확산, 모방적 동형화 등으 로 검정한 선행연구와 통계 분석 결과13)가 동일하였다. 이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채택에 의해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이 형성되고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간 분석과 사건사 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방적 압력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변화를 시각적 근거와 통계적 유의미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규범적 동형화의 압력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4〉에서 지역 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연구와 유의미하다는 연구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에 관한 연구 관한 지속적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4). 또한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의 통로 가 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컨설턴트(Consultant)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면 갈 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 반영한 통제변수 중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단체장 득표율 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먼저,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모두 반영하여 재정 자립도 가 증가할수록 조례 제정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재정 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조례 제 정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기도, 부정하기도 하는데 이 논의

¹²⁾ Daley and Garand(2005), Karch(2006), Beckert(2010), 장석준(2011)등 연구자들이 상위 지방정부가 하 위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¹³⁾ 문승민(2017), 유란희(2017) 등

¹⁴⁾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에 있어 장석준(2014)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유란희(2017)은 유의미하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는 후술과 같다. 재정 자립도의 경우 문승민(2017), 박나라(2018) 등의 연구에서 재정 자립도가 커 질수록 특정 조례 제정(갈등, 환경 관련 조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란 회(2017), 유한별(2018) 등의 연구에서 재정 자립도가 커질수록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재정자주도의 경우에도 선행연구에 따라 상 반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 해당 변수에 관한 향후 논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하민지 외(2011), 문승민(2017) 등의 선행연구에서 단체장 득표율이 증가할수록 특정 조례 제정 확 률이 낮아진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5).

결과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 론의 시각에서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에 대한 분석 결과 상위정부의 물리적, 정치적인 강제 적 압력이 아닌 사회적으로 강제화 되는 동형화 압력은 조례 제정에 있어 무의미하고, 주변 지방 자치단체의 선행적 제도 도입은 후행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하여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규범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갈등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 정책 확산의 메커니 즘¹⁶⁾ 등에 의거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들 외에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근 거하여 조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내 정치, 경제적 압력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유의미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더불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갈등 관련 조례의 군집화가 확인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 건사 분석을 이용하여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 압력 요인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지방자 치단체 간 지역 인접성에 따라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일정한 군집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¹⁵⁾ 본 연구에서 반영한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위험비(hazard ratio) 값을 이용한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는 사건사 분석 위험비 값이 0.8248668으로 그 영향을 계산하면 0.8248668-1 = -0.1751332로 조례 제정에 부(-)적 영향을 주며, 재정자주도는 사건사 분석 위험비 값이 1.306463으로 그 영향을 계산하면 1.306463-1 = 0.0306463으로 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단체장득표율의 위험비 값은 0.8756796으로 그 영향을 계산하면 0.8756796-1 = -0.1243204로 단 체장 득표율이 증가할수록 조례제정에 부(-)적 영향을 준다.

¹⁶⁾ Berry & Berry(1990; 2007)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앞선 제도주의 논의로 진행한 선행연구와 맥 락을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를 설 정하여 가설 검정을 진행하였고. 해당 변수가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규범적 압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정책 확산 요인으로 제시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과 더불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시각에서 조례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려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갈등 관련 조 례의 확산과 동형화의 형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리적 군집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신제도주의 동형화의 논의에서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강제적 동형화를 이끄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한 관찰을 시도하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도출하지 못하였 다. 하지만 모방적 동형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기능적 동질성을 띈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 관 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이 증가할수록 모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일정한 규범적 압력을 행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첫째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을 뿐이며, 공간 분석과 사건 사 분석 등의 통계적 결과에 의존한 결론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실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법적, 정치적 다이내믹(Dynamic)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로, 변수 측정에 있어서 사건사 분석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 분석의 결과에 따라 제외하 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만을 검정하였기 때문에 그 관측수가 적고,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적 동형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선행연구와 달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통계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해석이 부족하다는 점, 모방적 동형화 및 규범적 동형화의 경우 선행연구와 비슷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적 변화를 관찰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인터뷰 등을 질적 내용을 풍부히 하는 후속 연구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검정하여 연구의 통계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갈등 관련 조례에 관한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 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문희(2011).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 등 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1. pp.156-172

강인호·김영환·이민창(2005).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선호시설 유치갈등에

- 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협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Vol.9 No.1. pp.27-44 권영규(2006).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에 나타난 갈등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7 No.2. pp.159-189
-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김미나(2007). "지방공무원 교육훈력기법의 모방과 동형화". 「국가정책연구」. Vol.21 No.1. pp. 36-64
- 김인수(2017).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이슈주기 분석: 운형함수(spline function) 방법론의 적 용".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4호(2017. 12): pp.53-82
- 김재광(2019).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 「강원법학」Vol. 56. pp. 129-167
- 김태운(2014).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별 특성과 최소화 전략에 대한 연구: 대구·경북 사례를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pp.1-27
- 나태준(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 Vol.2004. pp.1-239
- 류도암·이선우·강문희·박성민(2016). "지방정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요인: 지방 중·고 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5 No.2. pp. 1-31
- 문승민·나태준(2017).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 정책혁신과 확산 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43. No.1. pp.149-167
- 박나라·김정숙(2018).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 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Vol.27 No.3. pp.1-38
- 박상규·심문보(2013).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양상에 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 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1. pp.105-133
- 백완기(1995). "행정학". 박영사
-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지방행정」. 45권511호. pp.136-137
- 변성수(2010).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경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 pp.365-371
- 석호원(2010).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 방행정연구」. Vol.24 No.1. pp.183-206
- 송재복·안병철(2013).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분석 소고: 광주전남지역 갈등사례분석"지방정 부간 갈등과 협력기제에 대한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2000~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pp.21-40
- 오성호·홍수정(2006).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울산북구청과 충북 진천 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현대사회와 행정」. Vol. 16 No. 3. pp. 333-362
- 유란희·김선형(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연구 동형화 이론의 검증을 통한 확산 의 이해 -". 「한국정책학회보」. Vol.26 No.3. pp.51-80
- 유한별·나태준(2018).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조례 제정에 미치는 시민사회의 영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4. pp. 59=79
- 윤태웅(2012).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에 관한 권역별 비교 연구". 「지방행정

- 연구」. Vol.26 No.1. pp.107-136
- 이동기·김연근(201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보」. Vol.27 No.3. pp.191-213
- 이민창·한종희·안병철(2005).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 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Vol.19 No.3. pp.71-93
- 이승모(2018).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갈등전환 이론의 적용". 「한국공공 관리학보」Vol.32 No.4. pp.277-299
- 이영동·강정운(2007),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pp.137-158
- 이용훈(2013).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공공관리학보」Vol.27 No.1. pp.1-26
- 이재열·강상진·방하남·이명진·박경숙·은기수, ... & 이윤석. (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주현·김효정(2010).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기제에 대한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2 No.4. pp.83-105
- 이희연(2012).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문우사
- 임정빈(2007).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지방정부연구」. Vol.11 No.3. pp.155-179
- 장석준(2014).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경쟁위험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4). pp.211-237
- 장석준·김두래(2014).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Vol.21 No.4. pp. 285-311
- 장석준·허준영(2016). "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Vol.25 No.3. pp.75-105
- 장현주(2018),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조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Vol.22 No.2. pp.433-453
- 조승현·전영옥(2011).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한국자 치행정학보」. Vol.25 No.1. pp.97-119
- 하민지·서인석·권기헌(2011).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4호. pp.151-179.
- 최병학(2014). "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2. pp.285-312
- 하연섭(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 하혜영(2007).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Vol.41 No.3. pp. 273-296
- 하혜영(2018). "지방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pp.1-2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6-25)

- 허철행·이희태·문유석·허용훈(2012).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 으로". 「지방정부연구」. pp.431-454
- Beckert, Jens. (2010). "Institutional Isomorphism Revisited: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nstitutional Change". Sociological Theory. Vol. 28 No.2. pp.150-166.
- Berry, F. S. & Berry, W. D.(1990).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4 No. 2. pp.395-415.
- (2007). "Innovation and Diffusion Models in Policy Research". in Paul A. Sabatier.(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Second Edition. Colorado: Westview. pp.223-260.
- Brown(1983). "Managing Conflict at Organizational Interface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Box-Steffensmeier, Janet M., & Bradford S. Jones (1997). "Time is of the Essence: Event History Model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4 pp. 1414-1461.
- (2006). "Event History Modeling: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 Coser(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Dahrendorf(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ley, Dorothy, & James Garand (2005). "Horizontal Diffusion, Vertical Diffusion, and Internal Pressure in State Environmental Policymaking, 1989-1998.".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3 No.5. pp.615-644.
- De-Hart-Davis, Leisha, and Barry Bozeman (2001). "Regulatory Compliance and Air Quality Permitting: Why Do Firms Overcompl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1. pp. 471-508.
- Deutch(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Maggio, Paul J., &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2. pp.147-160.
- Greenwood, Royston and C. R. Hinings(1996). "Understanding Radical Organizational Change: Bringing Together the Old and New Institutionalis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pp.1022-1054.
- Jensen, Jason L(2003). "Policy Diffusion through Institutional Legitimation: State Lotter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3. pp. 521-541
- Karch, Andrew (2006). "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4 No. 4 pp. 403-426.
- Kim, Tai Young, Dongyoub Shin, Hongseok Oh, Young-Chul Jeong(2007). "Inside the Iron Cage: Organizational Political Dynam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Presidential Selection Systems in Korean Universities, 1985-2002".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52 No. 2. pp.286-323

- Knutsen, Wenjue Lu(2012). "Adapted Institutional Logics of Contemporary Nonprofit.". Administration & Society. Vol. 44 No.8. pp. 985-1013.
- Lee, Min-Dong Paul, and Michael Lounsbury (2015). "Filtering Institutional Logics: Community Logic Variation and Differential Responses to the Institutional Complexity of Toxic Waste.". Organization Science. Vol. 26 No. 3. pp.847-866.
- March&Olsen(1984).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 3. pp.734-749
- March, J. G.&Simon, H. A.(1958). "Organization". John Wiley & Sons Inc.
- Meyer&Scott(1983). "Organizational environments: ritual and rationality". Deal. Beverly Hills, CA: Sage. pp.302
- Miller, Stewart Robert, Daniel C. Indro, Malika Richards and Daniel Han Ming Chng(2013). "Financial Implications of Local and Nonlocal Rival Isomorphism: A Signaling Paradox.". Journal of Management. Vol. 39 No. 7. pp.1979-2008
- Moon, Seung Min, T. J. Lah, Bo Kyung Kang, and Jee Hye Hyun(2016). "An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of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Korea, 2006-2014". Crisisonomy. Vol. 12 No. 3. pp. 53-68
- Mooney, Christopher Z. (2001). "Modeling Regional Effects on State Policy Diffus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4 No. 1. pp.103-124
- Pondy(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2 No. 2. pp.296-320
- Powell(1991). "Absolute and Relative Gai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4. pp. 1303-1320
- Strang, David and Wesley D. Sine(2002). "Interorganizational Institutions.". The Blackwell Companion to Organizations. MA: Blackwell. pp. 497-519
- Thornton & Ocasio (2008). "Chapter 3: Institutional Logics".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SAGE Publications Ltd
- Vasudeva, Gurneeta, Elizabeth A. Alexander, and Stephen L. Jone(2015). "Institutional Logics and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in Technological Arenas: Evidence from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in the Mobile Handset Industry." Organization Science. Vol.26 No.3. pp.830-846

유한별(劉한별):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로는 공공관리, 갈등관 리, 환경관리, 환경정책 등이다(yhb5898@gmail.com).

나태준(羅泰俊):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Bloomington)에서 행정학박사학위(2001)를 취득 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관리와 환경정책, 갈등관리 등이다(tjlah@yonsei.ac.kr).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Establishment of Conflict Related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Isomorphism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 Yoo, Hanbyeol Lah, T.J.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what factor affects the enactment of a conflict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 occurrence of conflict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GIS) and A history event model estimation reveals that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GO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t is confirmed that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ffect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Key Words: conflict, ordinance,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local government, NGO